

전자주주총회, 2027년 1월 의무화

상법 시행령 개정령이 2026년 7월 21일 공포됐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가 지켜야 할 주
요 내용입니다.

01

소집지 주총과 병행 개최

주주가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결의에 참가합니다.

02

인력·설비·보호체계 확보

소집·운영 기준과 절차를 회사가 직접 마련해야 합니다.

03

출석 주주 본인 확인 의무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본인확인기관을 거칩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되나

의무 대상

SCOPE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입니다.

2025년 말 기준 코스피 201곳, 코스닥 9곳 등 210곳이 대상입니다.

운영 위탁

OPERATION

의사진행과 결의 참가 절차는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관리기관은 인력·물적 설비, 개인정보 보호 체계, 사고 시 업무 연속성을 위한 보완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210 곳

2027년 1월 1일부터
전자주주총회를 열어야 하는 상장사

회사가 정할 수 있는 것

사전 신청

주총 전날까지
신청한 주주만 허용 가능

질의·발언

횟수와 시간을
미리 정할 수 있음

외국인 주주

본인 확인이 어려우면
회사 별도 방법 사용

입법은 끝났고 준비만 남았습니다

- 2025.07.03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조항 신설
- 2026.05.28 법무부, 「상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2026.07.14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의무 대상 210곳 확정
- 2026.07.21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 공포 — 관련 조항은 2027년 1월 1일 시행
- 2026 하반기 법무부·한국예탁결제원, 모의 전자주주총회 개최 예정
- 2027.01.01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시행

다음 단계

NEXT MILESTONE

2026년 하반기 모의 전자주주총회,
이후 2027년 1월 1일 본격 시행

지금 점검해야 할 세 가지

- 01 전자주주총회 소집·운영 기준과 절차를 담은 내부 매뉴얼 작성
필요한 인력과 물적 설비 확보
- 02 운영 위탁 시 관리기관의 역량 확인 후 계약 체결
인력·물적 설비·개인정보 보호 체계·보완설비 요건 등
- 03 모의 전자주주총회와 설명회를 활용
본인 확인 절차와 통신장애 대응 방안 사전 점검

실무 관심사

주주 본인 확인 절차의 설계, 총회 중 통신장애 시 결의의 효력 등이 실무자들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입법정책의 흐름,
그 동향을 가장 먼저 읽습니다.

— ISSUE TRACKING

— INSIGHT

— CUSTOM REPORT